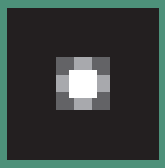


아시아리뷰
제14권 제2호(통권 31호), 2024

자유 주제

아시아리뷰 제14권 제2호(통권 31호), 2024: 199~237 https://doi.org/10.24987/SNUACAR.2024.8.14.2.199

일본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드러난 공정성·공평성에 대한 인식: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을 중심으로*

박지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일본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을 민간영어시험 활용안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토플(TOEFL)과 아이엘츠(IELTS)와 같은 민간영어시험을 대학입학공통테스트와 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문부과학성 대신의 교육격차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기로 취소됐다. 이것은 공정성 · 공평성의 문제가 이 계획이 좌초된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영어시험 대입 활용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된 과정과 이 계획이 철회된 이후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이뤄진 논의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입학전형이 다양화되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입시의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이 일본 사회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영어교육, 대학입시, 절차적 공정성, 실질적 공평성, 지역 간 격차

I. 서론

2021년 1월, 일본 정부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이하, 공통테스트)라는 새로운 대학입학시험을 도입했다(김용·엄아름, 2018; 지은림, 2021; 木村裕, 2020). 1990년 이후 30년간 시행한 대학입시센터시험(이하, 센터시험)이 암기한 지식을 평가하는 데 머물러,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신 공통테스트 국어와 수학 과목에는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독해력과 청해력을 주로 평가하는 공통테스트 영어시험과 함께 토플(TOEFL)과 아이엘츠(IELTS)와 같은 민간영어시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459).

을 대학 진학의 필수조건으로 지정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영어 말하기 능력도 평가하고자 했다.[1] 아울러, 수험생의 자기 주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활동을 학생 스스로 기록한 E-포트폴리오를 신입생 선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2021년 대학입시 개편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설정된 이유는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가 2014년 답신에서 원활한 고교-대학 접속을 실현하기 위해 학력의 3요소를 대학입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荒井克弘, 2021: 258-259). 학력의 3요소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의 핵심 개념으로 ① 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 ②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③ 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신학력관(新学力観), 살아가는 힘[生きる力], 확실한 학력[確な学力],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의 개념을 제시하며 학력의 의미를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문제해결 능력과 배우려는 의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했다(中村高康, 2018: 16-19). 2021년 대입제도 개편도 지금까지 초·중등교육 개혁에서 추구해 온 새로운 학력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이를 고등교육에서도 장려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세 축이었던 이상의 계획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다. 단기간에 서술형 문항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공통테스트는 센터시험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항으로만 출제됐다.[2] 민간영어시험을 이용해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려던 계획도 채점 기준이 모호하고 경제적·지역적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산됐다. E-포트폴리오를 신입생 선발에 이용하려는 대학이 적어, 결국 이를 관리하던 일반사단법인 교육정보관리기구는 해산되고 말았다.

1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가 주관하는 공통테스트과 비교해,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어학시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후자를 지칭할 때 민간영어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일본 정부의 공문서에 나온 문장을 직접 인용할 때는 영어검정시험 또는 승인된 어학(영어)시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2 센터시험에 비해 공통테스트에 종합적인 응용 능력을 요하는 문항이 출제됐다는 견해도 있지만(石川一郎, 2021: 40-47), 센터시험에도 사고력과 판단력을 검증하는 문항이 출제됐고(石井洋二郎, 2020: 180-184), 오히려 공통테스트의 수준이 센터시험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大内裕和 外, 2021: 14; 鳥飼玖美子, 2021: 35).

세 가지 대입제도 개편계획이 무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민간영어시험 도입에 대한 정치인 관료의 실언(失言)이었다. 2019년 10월 24일, 문부과학성 대신 하기우타 코이치(萩生田光一)는 BS후지 프라임 뉴스에 출연해 2021학년도 입시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계획이 수험생의 경제 상황이나 지리적 조건에 따라 불공평을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유복한 가정의 아이가 [민간영어시험을] 여러 번 치면서 워밍업하는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고3 때 두 차례 친 어학시험의 성적만 지망대학에 제공하므로, "자신의 분수에 맞게[身の丈に合わせて] 두 번을 잘 선택해 승부하고 노력한다면" 문제없다고 대답했다(宮崎亮, 2019).

교육격차를 용인하는 문부과학성 대신의 발언으로 인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2019년 11월 1일, 문부과학성은 우선 민간영어시험 도입을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文部科学省, 2021: 34). 2019년 12월에는 2021년 공통테스트에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주관식 시험 시행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치된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는 2021년 7월, 민간영어시험과 서술형 시험은 5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공통테스트에 요구되는 공정성·공평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상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문부과학성에 권고했다(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1: 21-22).

"2000년대 내내 [일본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학력'의 정의나 그 평가 방법에 중점이 두었던 것"처럼(姜姫銀, 2021: 7), 2021년 대입제도 개편은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고 함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대입제도 개편은 "입시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를 염려하고 의논하는 시점"만이 아니라, 대학입시 전반을 둘러싼 공정성·공평성의 문제가 일본 사회의 첨예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을 둘러싼 논쟁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입시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민간영어시험의 부정합성, 서로 다른 민간영어시험 간 점수환산의 부정확성, 영어 말하기 시험 채점의 질을 보장하기 곤란함과 같은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응시 횟수의 차이 발생, 대도시 학생에 비해 지방 학생이 시험장에 접근하기 어려움과 같은 실질적 공평성의 문제가 민간영어시험 도입이 무산된 주된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의 추진 경과와 이 계획이 연기된 이후에 이뤄진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대학입시를 둘러싼 공정성·공평성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2021학년도 대입 영어 말하기 테스트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문제는 고교-대학접속 개혁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바람직한 영어교육 방식 및 영어 능력에 대한 타당한 평가라는 교육학적 맥락에서 상세하게 다뤄졌다. 먼저, 도리카이 구미코(鳥飼玖美子, 2021)는 고교-대학접속 개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학교는 기초를 학습하는 보통교육의 장인 반면 대학은 전문지식을 탐구하는 연구의 장으로, 입시를 통해 서로 다른 교육단계를 단순히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아라이 가쓰히로(荒井克弘, 2018)도 고교-대학접속을 원활히 하려면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논의가 대입제도 개편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교육적 맥락과 테스트에 관한 연구에 입각한 비판이 제기됐다. 미야모토 히사야(宮本久也, 2018)는 영어권 취업희망자나 유학희망자를 평가하기 위한 토플과 토익은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학습지도요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플과 토익은 공통테스트 영어시험에 비해 어려운데,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도록 한다면 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토 히데토시와 동료 연구자들(Saito et al., 2022)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영어단어 수는 5,000개인데 비해, 민간영어시험의 독해 문제를 풀려면 이보다 많은 어휘를 알아야 하므로, 고등학생이 모르는 단어를 추측하며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 마사히코(阿部公彦, 2018)는 대입에 영어 말하기 시험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학술적 근거가 없다고 비

판했다. 민간영어시험 활용에 찬성하는 측은 입시가 바뀌면 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에서 말하기 교육의 비중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학생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Saito, 2019). 하지만 일본 대입 영어시험이 고등학생의 영어 실력에 미치는 환류 효과(flowback effect)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Paxton et al., 2022), 그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센터시험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했지만, 학생이 특별히 열심히 듣기 연습을 하지도 않았고 교사가 수업 시간에 듣기 연습을 충분히 시키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영어에 원래 관심이 있던 학생을 제외하면, 듣기평가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듣기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아베 마사히코(阿部公彦, 2021)는 오히려 영어 말하기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회화 능력 향상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모국어인 일본어도 읽기·쓰기·듣기·말하기를 똑같은 수준으로 잘하기는 어려운데,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에서 4가지 능력을 균등하게 함양하는 일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학입시를 대비해 영어 말하기 교육을 강조하면, 문법 이해나 단어 암기, 강세에 유의하여 발음하기 등 기초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어 오히려 회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말하기는 상호작용이 기본이므로 모니터를 향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는 회화 실력이 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간주하는 환상[ペラペラ幻想]에서 벗어나야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영어시험은 대학 입학시험으로서의 엄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었다. 하토 유미(羽藤由美, 2018)는 서로 다른 영어시험 간 점수환산 방식을 문제 삼았다. 수험생에게 충분한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최종적으로 일곱 종류의 민간영어시험을 영어 말하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관건은 서로 다른 시험 간의 점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였다. 문부과학성은 유럽언어공통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을 활용하려 했으나, CEFR은 유럽 국가들이 개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6단계(초급, 중급, 고급 각각 2단계로 구성)로 나눠 열거한 목록(can-do list)에 불과해, 대학 진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쟁적이며 중차대한 시험(high-stakes exams)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다(Mann, 2018). 더구나 점수 대조표는 영어시험 시행사가 CEFR과 개별 시험

성적 간의 관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검증하고 대응시킨 것에 불과했다(Saito et al., 2022). 게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문부과학성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점수 대조표를 여러 번 변경해, 점수 대조표의 신뢰성은 대입에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반면 하마나카 준코(濱中淳子, 2020)는 이와 같은 비판이 민간영어시험 활용안을 거부할 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에 반대하는 측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급급했을 뿐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입시개혁 추진론자의 주장을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 비판하지도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민간영어시험 응시료[3] 정도는 아르바이트해서 감당할 수도 있으므로 공평성의 차원에서 이 계획을 비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이 시행 직전에야 취소됐다는 점에서, 이 계획에 대한 비판은 반박 불가능할 정도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 대신의 실언이 민간영어시험 도입에 대한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하마나카 준코의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문부과학성도 "경제적인 상황이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하며 안심한 상태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의 준비 상황이 충분하지 못해서" 영어 말하기 시험 도입을 연기했다(文部科学省, 2020: 29). 또한, 전국고등학교장협회가 2019년 7월 전국 47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간영어시험 활용에 대해 69.1%가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시를 연기해야 한다."라고 응답했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74.5%의 고등학교가 경제적 격차, 74.3%는 시험의 공평성·공정성, 70%는 지역 격차를 꼽았다(日本経済新聞大学取材班, 2019). 즉, 경제적·지역적 불평등으로 인해 입시의 공정성·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수험생·학부모·교사·연구자 등이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에 반대한 주요한 이유이자(南

[3]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민간영어시험의 1회 응시료는 5,800엔에서 26만 엔이었다(Butler et al., 2021: 51). 고3 때 응시한 2회분의 성적을 입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민간영어시험 응시료로만 최소 5,800엔에서 최대 52만 엔을 부담해야 했다. 그리고 고3 이전에 연습 삼아 치는 시험에는 응시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3회 이상 응시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宮本久也, 2018: 30-31). 대학 진학을 위해 이미 공통테스트 응시료 1만 8,000엔, 대학별 본고사 응시료 3만 5,000엔을 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한 말하기 테스트 의무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風原朝和, 2018b; 宮本久也, 2018), 그 계획이 무산된 주된 배경이었다(Butler et al., 2021, 2022).

그러므로 2021학년도 민간영어시험 대입 활용 계획의 추진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입시의 공정성·공평성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이해 방식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계기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가 민간영어시험 도입의 문제점과 실패 원인을 주로 영어교육 및 평가의 적절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했다면, 이 논문은 학령기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와 일본 대학입시제도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민간영어시험 활용안의 좌초로 드러난 대학입시의 공정성·공평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마이클 케인이 제시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과 실질적 공평성(substantive fairness)이라는 개념은 이 문제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된다.[4] 절차적 공정성은 "모든 시험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즉 "같은(same) 또는 동등한(equivalent) 시험을 같은 또는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쳐야 하"며 "응시자의 수행(performance)은 같은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규칙과 절차를 사용해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다(Kane, 2010: 178). 단,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시험을 치는 경우) 형평성에 맞게 시험 절차를 조정하는 것(예를 들어 점자로 인쇄된 시험지를 제공하는 것), 즉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level the playing field)"은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실질적 공평성은 모든 시험 응시자에게 "점수에 대한 해석과 시험에 근거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규칙이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라는 원칙이다(Kane, 2010: 178-179). 구체적으로는 "시험이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일에 대해 같은 수준에 있는 응시자는 소속 집단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같은 시험점수를 얻어야" 하여, "성취도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똑같이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다. 그리고 시험을 근거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결과, 특히 집단에 따

4 영어의 fair는 '공정하다'와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어에서 절차의 문제와 관련될 때는 공정성을, 기회와 결과에 관해서는 공평성이라는 개념을 주로 쓴다는 점을 고려해, fairness를 공정성과 공평성으로 구분해 번역했다. 다만 본문의 IV장 2절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1차 자료를 직접 인용할 때는 케인의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절차적 공평성"과 "실질적 공평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라 차등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중시한다. 즉, 실질적 공평성에 입각한 평가는 시험 절차의 적절성이나 점수의 고저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며 그것이 응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고려해 시험점수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케인은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로리 쉐퍼트의 논의를 빌려 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절차적 공정성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유치원 입학 적성검사가 있다고 할 때, 발달 지연으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에게는 유치원 입학을 유예해도 괜찮다. 하지만 가정에서 적성검사에서 다룬 특정 기능(skills)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가 있다면, 이 점수만을 근거로 그 아이에게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낳는다. 더구나 그런 아이들이 특정 계급, 인종, 젠더에 주로 속한다면, 적성검사 점수를 근거로 그 집단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입학시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시험이 절차 면에서 공정하고 시험점수가 현재 시점의 성취도를 잘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해당 기능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시험점수를 근거로 유치원 입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케인의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일본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공평성·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정부의 각종 보고서와 이에 관한 2차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계획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기술한다. 나아가,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가 총 28차례 개최한 심의회(제1회 2020년 1월 15일~제28회 2021년 6월 30일)의 의사록 및 동 회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2020년 8월 12일~9월 11일) 중 민간영어시험 활용과 관련된 답변 111건 — 총 669건의 답변 중 가장 높은 비중인 17%를 차지했다 — 을 살펴봄으로써(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0a: 1), 대입제도 개편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공평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통시험에 엄밀한 공정성·공평성이 요구되는 이유를 대입제도의 다양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III. 민간영어시험 도입의 경과

1. 민간영어시험 도입 검토

글로벌 경쟁에 맞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자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 나카소네 수상의 자문기구였던 임시교육심의회는 1984년 4월에 제출한 제2차 답신에서 "대학입시에서 영어 능력의 다양한 면을 각각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제3의 기관에서 이뤄지는 검정시험 등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한다."라고 제안했다(須藤爽, 2022: 48).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대입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자민당이 여당이었던 2003년 6월,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은 "대학은 입학지원자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실용영어기능검정시험[5]이나 토플 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등 선발방법을 강구·개선하는 것도 고려한다."라고 했다(石井洋二郎, 2020: 116). 민주당 정권 시기의 글로벌 인재육성추진회의도 2012년 6월에 공표한 문서에서 읽기·듣기·쓰기·말하기라는 영어의 "4가지 기능(이하, 4기능)을 균형 있게 다루는 유형의 입시로의 전환"과 "일반입시에서 토플·토익 성적을 어떻게 평가·환산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적 방법의 개발·보급"을 요구했다(石井洋二郎, 2020: 116). 따라서 민간영어시험을 대입에 활용하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는 움직임은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표 1 참고). 2013년 4월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의 제안과 경제동우회의의 제안을 거쳐, 동년 10월 아베 총리의 직할 자문기구인 교육재생실행회의가 내놓은 제4차 제언에도 4기능을 고르게 함양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 영어 말하기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石井洋二郎, 2020: 117). 특히 교육재생실행회의의 제4차 제언은 "대학 입학자 선발"을 "다면적·종합적 평가·판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토플 등의 어학검정시험도 학력 수준의 달성도 판정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대학의 대처를 촉구한다."라고 민간영어시험

5 재단법인 일본영어검정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줄여서 에이켄(英検)이라고 부른다.

표 1 민간영어시험 활용안 논의의 경과

일시	발표 주체	주요내용
2013. 4.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토플 등의 일정 점수 취득을 대입응시자격 또는 고교졸업요건으로 지정
2013. 4.	경제동우회	•대입 영어에서 4기능 측정하는 민간영어시험 활용
2013. 10.	교육재생실행회의	•대학 측에 토플 등 민간영어시험 활용 유도
2014. 9.	영어교육방식에 관한 유식자회의	•센터시험에서 영어과목 폐지 •영어4기능 평가하는 민간영어시험으로 대체
2014. 12.	중앙교육심의회	•대입 영어 과목에 4기능 평가 가능한 문제 및 민간영어시험 활용 •민간영어시험 활용에 따른 제반 문제 검토회의 설치 제안
2016. 3.	고교-대학 접속시스템개혁회의	•만간영어시험의 활용 방식 및 말하기 시험 2020년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민간영어시험을 입시에 활용 가능
2016. 8.	문부과학성 고교-대학접속개혁 진행상황	•민간영어시험만 활용 또는 •대입영어과목과 민간영어시험 점수 합산하는 방안 검토
2017. 7.	문부과학성 고교-대학접속개혁 진행상황	•2023년까지 공통테스트의 영어시험과 민간영어시험 병행 확정
2017. 11.	국립대학협회 기본방침	•2023년까지 일반입시 지원자 공통테스트의 영어시험과 민간영어시험 모두 응시 필수로 규정
2018. 3.	대학입시센터 어학시험 검증 결과	•민간영어시험 운영업체 7곳의 22개 시험을 인정
2018. 3.	국립대학협회 가이드라인	•민간영어시험 일정 점수 이상만 응시 가능 또는 •민간영어시험 점수를 환산표에 따라 공통테스트 점수에 가산
2018. 8.	도쿄대학 입시요강 추가발표	•영어 말하기 시험을 필수로 하지 않기로 함
2019. 6.	민간영어시험 이용 중지 청원서	•약 8,000명 서명 국회 제출
2019. 7.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영어 말하기 시험 실시 방침 확정 요청
2019. 9.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영어 말하기 시험 도입 연기·재검토 요청
2019. 10.	문부과학성 대신	•“자신의 분수에 맞게 두 번을 잘 선택해 승부”
2019. 11.	문부과학성 대신	•영어 말하기 시험 시행 연기 •2024년 도입 계획을 1년간 검토
2021. 7.	대학입시방식에 관한 검토회의 제언 발표	•형식적/실질적 공평성 개념 제시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시험 실시 곤란 권고

출처: 南風原朝和(2018a)와 大平誠(2019)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教育再生実行会議, 2013: 7).

2014년 9월, 영어교육방식에 관한 유식자 회의(이하, 유식자 회의)는 한 걸음 더 나가 민간영어시험 성적을 단순히 대입 전형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6] "대학입시센터시험과 개별대학 입시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4기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영어 자격·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최종 보고서에 명시했다(英語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4: 7/10 Bar). 다만 유식자 회의도 민간영어시험을 대입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학습지도요령과의 관계, 평가의 타당성, 환산 방법, 응시료·응시 장소, 적정·공정한 실시 주체 [선정], 시험 간 검증" 등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6/10 Bar). 그러나 "4기능에 대응한 학력검사를 [대학입시센터가] 조속히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영어 자격·검정시험을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4기능에 대응하는 입학자 선발을 기대한다."라고 제안했다(6/10 Bar). 유식자 회의 내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라고 하며 상당히 무리하게 영어시험의 민영화, 센터시험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결과였다(阿部公彦, 2017: 46).

중앙교육심의회도 2014년 12월에 제출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고교-대학 접속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 대학 입학자 선발의 일체적 개혁에 대하여"라는 답신에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4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예를 들어 서술형 문항 등)나 민간의 자격·검정시험의 활용을 통해, '읽기', '듣기'만이 아니라 '쓰기', '말하기'도 포함한 영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中央教育審議会, 2014: 15). 다만, 쓰기·말하기 시험을 대학입시센터가 출제할지 민간영어시험으로 대체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6 민간영어시험은 이미 일본의 대학입시에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은 공통테스트와 대학별 본고사 등 필기시험 위주의 일반선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 및 활동 내용 등을 중요시하는 학교추천형선발, 그리고 활동보고서, 지원 이유서, 면접, 소논문,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 종합형선발로 나뉜다. 2020년 입시의 4만 6,007개 전형 중 어학시험을 활용한 비율은 종합형선발 33.3%, 학교추천형선발 20.9%, 일반선발 16.1%였다(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0b: 61). 입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입학자의 17.1%, 종합형선발의 35.1%, 학교추천형선발의 18.5%, 일반선발의 12.6%가 어학시험을 활용해 대학에 진학했다(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0b: 63).

유식자 회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민간영어]시험 간의 득점 환산 방법, 응시료 등 경제 격차 해소, 응시 기회 등 지역 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고교-대학 접속시스템 개혁회의도 2016년 3월에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특히 환경정비나 채점 등의 관점에서 2020년 첫 입시부터 실시하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유보적인 의견을 표명했다(高大接続システム改革会議, 2016: 60). 왜냐하면, 개혁회의에서는 공통테스트 국어·수학 과목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할 것인지를 주로 논의했고, 민간영어시험 활용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大平誠, 2019; 氏岡真弓, 2019b). 게다가, 이것을 대입에 활용하려면 "입학자 선발 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적정하고 공정하며 투명성이 높은 시험실시 체제", "비용 부담 방식이나 응시 기회의 확보", "계속성·안정성의 확보" 등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기도 했다(高大接続システム改革会議, 2016: 60).

결과적으로 2016년 3월까지는 일본 정부가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평가를 2021학년도 대입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와 고교-대학 접속시스템 개혁회의가 2020년까지 공통테스트의 영어 과목을 민간영어시험으로 대체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문부과학성도 민간영어시험을 50만 명에 달하는 공통테스트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공평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2. 민간영어시험 도입 추진과 좌초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2016년 8월,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위해 대입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한 4기능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이나 체제 등의 관점에서 민간의 자격·검정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래에는 수험료 부담에 대해 배려하고 관

계자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격·검정시험만 활용해 영어 4기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南風原朝和, 2018a: 108).[7] 다만 "당분간은 자격·검정시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학입시센터가 주관하는 [공통테스트에서] 영어시험(읽기, 듣기)을 실시하고, 정부가 승인한 자격·검정시험의 2기능(쓰기, 말하기) 결과와 공통테스트의 결과를 합쳐, 평가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문부과학성은 위의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서, "2020년도 이후 공통테스트의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대학입시센터가] 승인한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A안과 "제도의 대폭 변경에 따른 수험생·고교·대학에의 영향을 고려해 공통테스트의 영어시험을 2023년도까지 실시하고,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공통테스트와 승인된 [민간영어]시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B안을 제시했다(文部科学省改革推進本部·高大接続改革チーム, 2017: 12). 그리고 민간영어시험 활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이한 시험 간의 점수환산 기준으로 CEFR를 제시하고, 민간영어시험의 반영 횟수도 고3 4월부터 12월 사이에 응시한 두 차례의 결과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고3 때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고등학교와 대학 측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고등학교장협회는 "B안을 지지하면서 공통테스트에서 영어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망"했고, 국립대학협회도 "공통테스트 영어시험의 폐지는 승인받은 [민간]영어시험의 실시·활용 상황을 검증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도도부현교육장협의회도 민간영어시험의 "도입 시기도 포함해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라며 A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文部科学省, 2017: 24).

위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문부과학성은 2021학년도 입시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文部科

7 현재 문부과학성이 2016년 8월 31일에 발표한 "고교-대학 접속 개혁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高大接続改革の進捗状況について)"의 링크는 삭제되어 원문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南風原朝和(2018a)의 부록에 수록된 문장을 인용했다.

学省, 2017). 다만, 2023년까지 공통테스트의 영어시험과 민간영어시험을 병행하는 B안을 채택했다. 동시에 민간영어시험 활용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험 장소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센터시험과 같은 수 이상의 실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 단체와 조정을 꾀하"고, 응시료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대학 수험생 전체에 대해 억제하면서, 저소득 세대 수험생 등의 응시료 면제 등 배려를 [민간업체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文部科学省, 2017: 25-26). 그리고 장애가 있는 학생처럼 "승인된 [민간]영어시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수험생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저소득자 대상 장학금에서 민간영어시험 응시료를 충당하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에 공평한 입시 관리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2018년 3월, 문부과학성은 대학입시 영어성적제공 시스템의 참가요건을 충족한 민간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南風原朝和, 2018b: 12). 문부과학성이 한 일은 "일본 국내에서 2년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고등학생이 응시한 실적이나 대학 입학자 선발에 활용된 실적이 있을 것", "한 차례의 시험에서 영어 4기능을 치우침이 없이 평가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한 것일 뿐 민간영어시험이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함을 입증한 것은 아니었고, 심지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에도 예외 조항을 통해 입시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었다(羽藤由実, 2018: 56-59).

영어 말하기 시험 실시가 기정사실이 되자, 국립대학협회는 민간영어시험의 타당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타협"을 하고 말았다(羽藤由実, 2018: 67). 2017년 11월, 국립대학협회는 "안타깝게도 [2017년] 6월에 지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 아직 상세한 답변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으나", "개혁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각 대학 및 수험생의 준비와 마음 상태를 고려"해 민간영어시험 결과를 국립대학 입시에 활용하겠다고 결정했다(一般社団法人国立大学協会, 2017a). 국립대학협회는 "일반선발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에게 승인된 어학시험과 대학입시센터의 새로운 테스트[공통테스트]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을 모두 부과"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一般社団法人国立大学協会, 2017b: 3).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의 검정시험 결과를 지원 자격으로 하"거나 "CEFR에 따른 대조표를 토대로 새로운 테스트의 영어시험 득점에 가산점을 부과"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一般社団法人国立大学協会, 2018: 1).

이후에도 고등학생·고등학교 교사·연구자 등은 입시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石井洋二郎, 2020: 154-156).[8] 2019년 6월에는 이 계획에 반대하는 8,000명의 시민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7월에는 전국고등학교장협회도 조속한 방침 확정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9월에는 계획 연기와 재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7월에는 토익을 주관하는 업체가 시험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대입 영어시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반대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민간영어시험 도입 계획을 강행했다. 그러나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10월 문부과학성 대신의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발언으로 인해 이 계획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고, 문부과학성은 2019년 11월 1일, 이 제도의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11월 29일 국립대학 대부분이 민간영어시험 성적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3. 민간영어시험 도입 계획의 무리한 추진 이유

민간영어시험 대입 활용 계획의 문제점은 사실상 계획이 제안되던 시점부터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문부과학성이 이 계획을 강행한 까닭은 정·재계가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氏岡真弓, 2019b). 문부과학성 대

8 나카무라 다카야스(中村高康, 2021: 148-150)가 2020년 3월 전국 2,997명의 고등학교 2학년-즉, 영어 말하기 평가의 첫 대상자-에게 실시한 긴급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통테스트에 어학시험 도입이 연기되어 다행이다"라는 항목에 81.7%(해당함 50.1%, 약간 해당함 31.6%)가 동의한 반면, 18.2%(별로 해당하지 않음 11.1%, 전혀 해당하지 않음 7.1%)는 동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영어민간시험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26.8%(해당함 8.9, 조금 해당함 17.9)가 찬성했지만, 73.3%(별로 해당하지 않음 36.4%, 전혀 해당하지 않음 36.9%)는 반대했다.

신(2012년 12월 26일~2015년 10월 7일)이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이 2013년 3월 수상 관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입시에 토플 등의 활용도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싶"고, 이 일에 "산업계·교육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민간영어시험 활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라쿠텐 회장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를 포함해 산업경쟁력회의에 참여한 다른 정·재계 인사도 일본인의 영어 수준이 너무 낮다며, 대학입시에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도입함으로써 영어 구사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력[即戦力]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요청에 정치가 응하는 형태로, 민간시험 활용이 대학입시 개혁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전직 문부과학성 간부도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라, 반드시 4기능 [평가를] 한다는 압력이 매우 강했다."라고 증언할 정도였다(氏岡真弓, 2019a). 도쿄대학도 이러한 압력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2018년 3월 도쿄대학의 입시 담당 이사가 "현 시점에서 업자테스트를 입학시험으로 이용하는 것은 졸속"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2018년 4월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회의에 참석한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성 대신은 도쿄대학이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과 다른 대학에 발신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도쿄대학을 잘 지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2주 후에 도쿄대학은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NHK, 2019).[9]

2013년 이후에도 정·재계가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테스트 도입 계획을 주도했다. 표 2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관련된 주요 회의의 참여자 구성을 보여준다. 유식자 회의와 그 아래 설치된 영어능력 평가 및 입시에서 외부시험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참여자 중에는 기업 측의 비율이 여타 회의보다 약 20% 높았다.

9 하지만 2018년 9월, 도쿄대학은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에 대한 학내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 어학시험 성적 제출을 일반선발의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石井洋二郎, 2020: 133-152). 워킹그룹은 도쿄대학 헌장에 "도쿄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걸맞은 자질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민간영어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쿄대학에 지원할 자격조차 주지 않거나, 영어라는 특정 과목의 성적만으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도쿄]대학의 이념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어학시험 필수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더 중요한 점은 유식자 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기업 측 참여자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유식자 회의에는 2012년부터 회사 내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라쿠텐의 회장이 참여했다. 유식자 회의의 의사록을 보면 그의 발언권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민간영어시험 도입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쿠텐은 영어교육사업을 개시했다(阿部公彦, 2018: 70). 게다가 소위원회는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에 찬성하는 대학교수, 영어 강사, 그리고 라쿠텐 회장을 포함한 기업 측 인사로 구성됐다(須藤爽, 2022: 58). 결과적으로 이 계획에 적극적인 인사가 주도한 유식자 회의는 대학입시센터가 주관하는 영어시험을 민간업체의 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제출했고, 문부과학성은 이를 근거로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시험 실시를 추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영어 능력 평가 및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 영어자격·검정시험의 활용 촉진에 관한 연락협의회는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7명은 영어시험을 실시하는 민간업체의 관계자였다(阿部公彦, 2017: 42-43). 대

표 2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관한 회의의 참가자 구성

입시관련회의 / 회의참여주체		교육재생 실행회의(2013)	영어교육방식 유식자회의 (2014)	외부시험활용 소위원회(2014)	고대접속시스템 개혁회의(2016)	대학입시방식 검토회의 (2021-2022)
대학	영어교육	0	4	2	0	1
	교육일반	1	0	0	4	8
	기타	7	0	0	7	5
	중간합계	8(36.4%)	4(36.4%)	2(33.3%)	11(57.9%)	14(73.7%)
중고등학교, 교육위원회		6(27.3%)	4(36.4%)	2(33.3%)	5(26.3%)	2(10.5%)
대학입시센터		0	0	0	1(5.3%)	1(5.3%)
기업	교육관련	1	1	1	1	0
	교육무관	3	2	1	1	2
	중간합계	4(18.2%)	3(27.3%)	2(33.3%)	2(10.5%)	2(10.5%)
기타		4(18.2%)	0	0	0	0
합계		22	11	6	19	19

출처: 須藤爽(2022: 59)의 표를 일부 변형함.

학입시에 민간영어시험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는 연락협의회에서 배제하고, 유식자 회의 등에서 민간영어시험 활용에 찬성했던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위원으로 위촉했다. 즉, 사교육업체나 영어시험을 주관하는 민간사업자, 본인 전공 분야의 확장을 꾀하려는 대학교수, 영어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등이 문부과학성이 설치한 각종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한 셈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영어 말하기 시험 실시를 위시한 대입제도 개편이 좌초된 것은 전문가에 대한 경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무시에 기인한다(中村高康, 2020). 일본 정부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영어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이념을 앞세우며 전문가의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정·재계의 압력을 받는 가운데 대학입시를 바꾸면 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이 바뀌고,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입시제도 개편을 밀어붙였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역류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간과됐다.

세계화로 인해 일본에서 일하고 생활하는데 영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전제마저도 과장된 것이었다. 테라사와 타쿠노리(寺沢拓敬, 2021: 129-135)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과거 1년간 영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2006년보다 2010년에 영어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넷상에서 영어를 사용했다는 응답(9.7%→10.0%)만 소폭 늘어났을 뿐, 외국인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7.4%→6.1%), 영화·음악·독서(26.8%→23.1%), 해외여행(9.3%→7.8%) 등의 영역에서는 영어 사용이 줄었다. 또한, 직장인에게 업무상 영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도 2006년에는 응답자의 21%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010년에는 16.3%만 동의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무역량과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화로 인해 영어 사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셈이다.

또한, 테라사와(寺沢拓敬, 2021: 141-142)는 고학력자와 화이트칼라가 다수 포함된 인터넷 패널 조사에서도 영어 사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2021년 시점에 과거 1년간 업무상 영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9%였지만, 동시에 일 때문에 한 번이라도 외국인과 일본어로 의사소통한 사람도 26%, 번역·통역 앱을 이용해 외국어에 대응한 사람도 26%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테라사와의 연구는 업무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직장인 중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해 영어 사용이 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대학입시 개편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할 수 있다.

IV. 민간영어시험 도입 논쟁에 드러난 공정성·공평성에 대한 인식

1. 여론 수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공정성 · 공평성에 대한 인식

민간영어시험을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된 2021년 5월,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는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입시는 공평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지역·경제 격차 문제를 포함하는 민간영어시험 활용안은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검토한 시책이었는가? 대학 진학을 학생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장애물로 느끼는지 상상해 보길 바란다. 이 세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두 필사적으로 입시를 준비했다. 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대입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와 시책의 충실화에 전력을 쏟는 것이야말로, 문부과학성의 사명임을 확신한다."라고 썼다(酒井純子, 2021). 일본 사회에서 학력(學歷)이 개인의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松岡亮一, 2021), 대학입시가 지역·경제 격차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 사회가 공통테스트에 요구하는 공정과 공평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가 실시한 여론 수렴 조사에 모인 669건의 응답 중에서 민간영어시험 도입에 관한 의견 111건을 살펴보면(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0a: 41-51), 우선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한 의견이 총 25건 있었다(353, 359, 365, 383, 388, 389, 394, 396, 398, 408, 409, 410, 416, 418, 420, 421, 423, 424,

428, 430, 433, 436, 438, 440, 449). 먼저 설문 응답자들은 채점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424번 응답자(가고시마현, 40대, 교직원)는 "영어 4기능의 육성과 평가는 새로운 고교학습지도요령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지만, "50만 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 영어 4기능을 평가하고, 단기간에 정확·공정하게 채점하는 것이 가능할지 매우 염려된다."라고 밝혔다.[10]

응답자들이 민간영어시험의 엄밀성에 대해 의심한 이유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영어시험 성적을 동등하게 비교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409번 응답자(미에현, 50대, 고교 교사)는 "미에현에서 칠 수 있는 시험은 [일본영어검정협회가 실시하는] 에이켄(英検)밖에 없고, 그 이외의 시험을 칠 곳은 매우 적어 불편"하며, "상이한 시험 간 점수 비교를 엄밀하게 할 수 없"는데 "애매모호한 척도로 경쟁시험인 대학입시를 공평하게 실행할 수 없다."라며, 여러 민간영어시험 중 하나만 대입 시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9번 응답자(도쿄도, 10대, 고등학생)도 "민간영어시험 말하기와 듣기는 채점 기준이 모호하고 채점자의 독단에 의해 판단"이 이뤄지므로, "모든 수험자에게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대학입시에서 영어 4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장점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420번 응답자(나가노현, 60대, 교직원)는 민간업체가 시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채점하는지, 채점은 어디서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채점하는지 알 수 없"어서 "채점자 간의 신뢰성과 채점자 내의 신뢰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449번 응답자(사이타마현, 30대, 전문직)는 "공평하며 실수 없는 채점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자유 서술, 자유 발언 형식의 시험을 공통테스트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채점하면 반드시 평가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이런 방식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통테스트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CEFR을 입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408번 응답자(미에현, 50대, 고교 교사)는 "민간영어검정시험은 각각 용도가 다

10 이 절에서는 참고 자료의 반복적인 표기를 피하기 위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련번호와 거주지역, 연령대, 직업을 괄호에 표현하는 식으로 인용한다.

르므로 학생의 기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CEFR[과 개별 어학시험 간의 점수 대조표]도 [문부과학성이 검증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 관계자가 작성한 것이라 신뢰성이 없다."라며, 민간영어시험을 대입의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민간업체가 주관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를 들어, 이것을 공통테스트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면 대학입시센터가 말하기 시험을 개발하고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실질적 공평성의 차원에서도 민간영어시험 도입안에 반대했다. 이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획에 찬성한 응답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84번 응답자(교토부, 40대, 고교 교사)는 "말하기 시험 실시에 완벽한 공평성을 요구하지 말고, 어떤 시험에서나 실력과 득점 사이에는 일정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도입이 연기된 것은 공평성이나 지역 격차·경제 격차 등이 주로 문제시되는 모양새"였지만, "이런 것은 영어 말하기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시험에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완벽한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라는 문제는 민간업체가 실시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만이 아니라 대학입시센터가 주관하는 공통테스트에서도 발생하므로, 실질적 공평성까지 고려해서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31명의 응답자는 경제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입시의 공평성·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영어시험 도입에 반대했다(347, 350, 356, 357, 377, 378, 386, 392, 395, 397, 398, 399, 403, 404, 407, 417, 422, 425, 427, 428, 429, 431, 432, 433, 435, 436, 439, 445, 450, 452, 456). 357번 응답자(가나가와현, 10대, 고등학생)는 "지방과 도시부는 시험 응시 기회가 전혀 달라 도시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공통테스트 1만 8,000엔, 본고사 3만 5,000엔"만으로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데 "에이켄 2번이면 1만 4,800엔"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입시개혁은 지방과 도시부, 빈곤층과 부유층의 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03번 응답자(오카야마현, 50대, 고교 교사)도 "응시료가 비싸고 시험 장소가 멀어서 기

회균등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보호자의 "수입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도모할 수 없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단지 응시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아니라 시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수험생 사이에 불공평함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이유는 민간영어시험 주관 사업자가 시험 장소로 지정한 수가 공통테스트 시험장 수에 턱 없이 못 미쳤기 때문이다. 공통테스트는 전국 700여 곳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데 비해, 민간영어시험은 운영업체에 따라 적게는 47곳, 많게는 400곳에서 700곳에서 치러질 계획이었다(小川佳万, 2019: 89). 그러므로 대도시 학생은 거주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영어시험을 쉽게 칠 수 있지만, 지방 학생, 특히 시험 장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의 현청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수험생은 이 시험을 치기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지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 간 불공평함을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설문 응답자는 경제적·지역적 격차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성취도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똑같이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며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결과, 특히 집단에 따라 차등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실질적 공평성의 차원에서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을 비판했다(Kane, 2010: 178-179). 무엇보다도 이들은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경제 격차와 지역 격차가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399번 응답자(도쿄도, 60대, 고교 교사)는 민간영어시험 활용에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 격차를 입시에 도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1, 고2 때 여러 번 쳐 보고 고3 때 유리하게 되는 데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 텐데, "응시료도 고액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저학년 때 여러 번 응시하기 어려"워, "경제력의 격차가 민간영어시험의 결과에 반영되어 입시의 공평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435번 응답자(아이치현, 30대, 사교육업)도 "학교 교육을 통해 익히길 기대하는 말하기 능력의 목표와 이에 필요한 방법과 시간 등의 관계가 불명확 상태에서 대학입시에 말하기 시험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학교 교육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만 학교 밖에서 영어 회화를 연습하게 되어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97번 응답자(이와테현, 40대, 고교 교사)는 시험 장소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도시부와 지방에는 교육 시설 등 환경이 다르고 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확

대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민간영어시험은 지역 간 격차로 인해 공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민간영어시험을 도입하면, 경제 격차와 지역 격차로 말미암아 수험생의 진로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427번 응답자(가고시마현, 30대, 교직원)는 "공평성·공정성의 관점에서 민간영어시험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 이유는 "이도(離島) 등의 지역과 대도시권을 비교해 보면 민간영어시험을 칠 기회와 상황에 큰 차이가 있어서 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정에서는 민간영어시험을 칠 여유도 없고,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에 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는 환경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민간영어시험의 말하기 평가와 점수환산이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영어 말하기 능력을 키우고 말하기 테스트에 대비하는 일 자체가 보호자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제한된다면, 이 시험 때문에 학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은 공통테스트의 영어 과목 시험을 민간영어시험으로 대체하려는 조치가 대학입시의 공정성·공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들은 서로 다른 테스트에서 받은 점수를 동등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방법이 없으므로 민간영어시험의 도입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했다. 나아가 민간영어시험을 대입의 필수요건으로 지정하면,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과 학생의 거주지역에 따라 시험에 대한 접근성만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서마저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게다가 영어 말하기를 동등하게 학습할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말하기 테스트 결과 때문에 개인의 진로가 좌우되는 것 — 예를 들어, 민간영어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 — 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설문 응답자는 대입과 같은 경쟁적인 시험에서는 절차적 공정성만이 아니라 실질적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 제언에 나타난 공정성 · 공평성에 대한 인식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8차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대학입시 방식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검토회의의 위원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어능력[総合的な英語力]"을 육성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1: 19), "민간영어시험 업체에 따라 응시 장소, 응시료, 실시 횟수, 그리고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천차만별인 문제를 단시간에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공통테스트의 일부로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1: 25). 앞서 검토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영어시험에도 "대학입학공통테스트 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공평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런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1: 26), 문부과학성의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한 말하기 시험 실시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검토회의의 제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대학 입학자 선발에 요구되는 원칙을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공평성의 확보", "적절한 능력의 판정", "하급 학교에의 악영향 배제"는 "일본형 대학 입학자 선발 제도의 3원칙"으로 간주됐다(木村拓也·倉元直樹, 2006: 16). 이것은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가 1971년 6월 1일에 발표한 "앞으로 학교 교육의 종합적인 확충·정비를 위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라는 답신에서 "대학 입학자 선발은 대학 교육을 받는데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다면적으로 판정하고, 공정하며 타당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실시하는 것과 함께, 입학자 선발을 위해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의 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971년 이전 대학입시에서는 고교 내신, 학력고사, 적성시험이라는 3가지 성적지표를 중시했으나, 이 답신을 계기로 성적에 대한 고려는 "적절한 능력의 판정"으로 축소됐고, "공평성의 확보"와 "하급 학교에의 악영향 배제"가 일본의 대학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木村拓也·倉元直樹, 2006: 20).

그러나 민간영어시험 도입 여부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했고, 민간사업자가 응시 기회를 공평하게 확보하고 영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대학입시의 공공성이 훼손됐다. 그러므로 검토회의는 "해당 대학에서의 학업·졸업에 필요한 능력·적성 등의 판정, 수험기회·선발방법에 있어서의 공평성·공정성의 확보,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접속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대학입시의] 실시"를 "대학 입학자 선발에 요구되는 원칙"으로 제시했다(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1: 2-3). 이 세 가지 원칙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토회의가 "수험기회·선발방법에 있어서의 공평성·공정성의 확보"를 두 가지 차원, 즉 "형식적 공평성의 확보"와 "실질적 공평성의 추구"로 구분해 정의했다는 사실이다.

우선 "형식적 공평성"에 관해서, 대학입시 결과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으려면 "동일한 선발 구분에서는 [시험을] 공평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것(형식적 공평성의 확보)이 불가결하다."라고 했다(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1: 3). 하지만 "학력검사의 결과에 따른 선발만"이 "공평·공정한 선발은 아니"며, "선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성·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전제 위에, 일반선발만이 아니라 종합형 선발이나 학교 추천형 선발을 포함해, 선발방법과 평가 척도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지원자의 능력, 적성 등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영어시험의 도입만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의 채점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려던 계획에 대해,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의 협력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엄밀성·중립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利益相反)의 관점에서 의심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충분히 신중하게 구축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즉, 검토회의는 필기시험에서 1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는 기계적인 공정성만 추구하지 않고, 명확한 선발기준에 따라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형식적 공평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검토회의는 "형식적 공평성의 확보"만큼이나 "실질적 공평성의 추구"를 중시했다. "지리적·경제적 조건을 배려한 수험기회의 확보나, 장애인차별해소법의 규정에 근거한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 충실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받아들이는 배려" 등을 통해 대입에서 "실질적 공평성"

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과대학에서 여자 수험생이나 재수생의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처리한 일이 2018년에 발각된 것을 계기로 열린 대학 입학자 선발의 공정 확보 등에 관한 유식자 회의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 불합격시키는 일"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현역·재수생의 구분, 출신·거주지역 등과 같은 속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급해서 차이를 두는 것"을 부적절한 입학자 선발방법으로 규정하며 형식적 공평성의 차원을 다루는 데 머물렀다(大学入学者選抜の公正確保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9: 9). 이에 비해, 실질적 공평성에 대한 검토회의의 논의 결과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회의의 의사록을 보면, "형식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쉽게 도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11] 검토회의는 제6회 심의회(2020년 4월 23일)부터 제12회 심의회(2020년 7월 21일까지 대입과 관계된 각종 단체(공립·사립고등학교협회, 민간영어시험 운영업체, 경제단체연합회,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교육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특히 고등학교 관계자는 1점을 다투는 기계적인 선발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제9회 심의회(2020년 6월 6일)에 출석한 고등학교 교사와 지역교육위원회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채점해 공평성·공정성을 담보하자고 제안하거나(7/10 Bar), CEFR을 활용한 단계별 평가는 경계선에 있는 학생에게 불리하므로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의 방식이 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10 Bar, 6/10 Bar).

심지어 검토회의 위원 간에도 대입의 공정성·공평성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다. 제15회 심의회(2020년 10월 16일)에서는 대입에 요구되는 원칙과 정책 결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공정성과 공평성의 확보, 특히 시험실시 업무에서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추가"하고 "지리적·경제적 사정에 대한 배려와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명기하자는 한 위원의 제안에 대해(3/10 Bar), 또 다른 위원은 "대입에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자면서 대학입시를 개선하자, 공평하게 하자라고 말하면 곤란"하며 입학시험을 운영하는 "비용도 생

11 검토회의의 의사록은 문부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103/index.htm(검색일: 2024. 6. 11.)에서 전부 열람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의사록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개별 심의회 의사록 링크를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심의회가 개최된 날짜와 참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만 간략하게 표시한다.

각"해야 하는데 "점점 부담이 커지는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5/10 Bar). 즉, 검토회의가 대입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위원 사이에 대학 입학자 선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검토회의의 양상이 바뀐 것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활동 기록을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를 다루었던 제17회 심의회(2020년 11월 17일, 2/10 Bar)에서 형평성(equity) 개념이 제시된 덕분이었다. 이 심의회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놓인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 조처(affirmative action)를 할 것인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수험생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제20회 심의회(2020년 12월 22일)에서도 대학입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경제적 격차에 대해 형평성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하며(1/10 Bar),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보다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공정과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이 좀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3/10 Bar).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22회 심의회(2021년 3월 4일)에서 처음 제안된 "형식적 공평성"과 "실질적 공평성" 개념은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사실은 제25회 심의회(2021년 4월 20일, 8/10 Bar)에서 한 위원이 "형식적 공평성에 더해 실질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이 "위원들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를 얻은 것은 대단히 감사할 일"이라고 언급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토회의는 공통테스트에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하고 주관식 문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기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제28회 심의회(2021년 6월 30일; 9/10 Bar)에서 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검토회의가 대학입시 선발에서 공평성·공정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형식적인 공평성 확보만이 아니라 실질적 공평성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교육 정책사에 남을 만큼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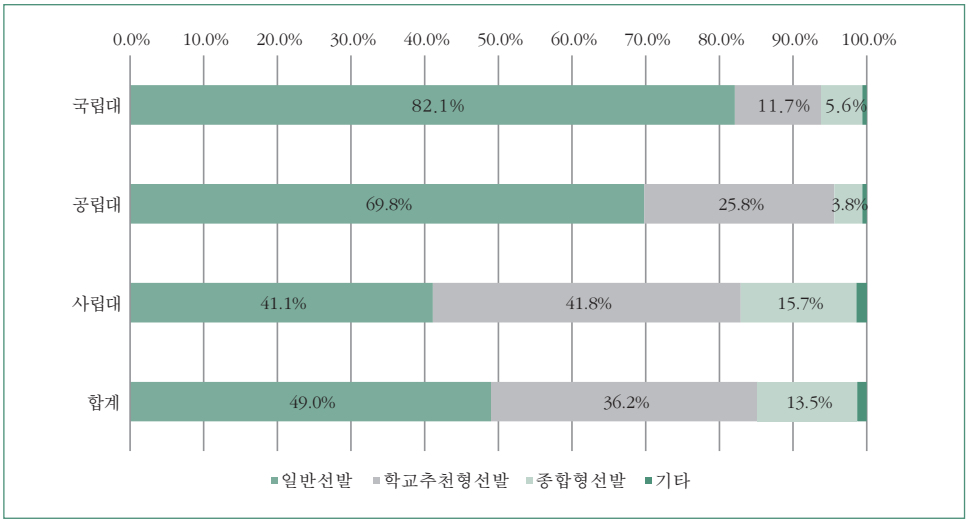
다만, 검토회의가 규정한 "실질적 공평성" 개념이 대학 입학자 선발에서 기회의 평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1회 심의회(2020년 1월 15일, 7/10 Bar)에서 이미 시험 절차의 적절성이나 점수의 고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도 고려해 시험 성적을 해석하고 활용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원 100명인 입학시험에서 90점을 받아 100등인 학생이 도쿄도 내 사립 중·고일관교 출신이고, 89점을 받아 101등이 된 학생이 지방 공립고교 출신일 때, 어느 쪽을 합격시키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며,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대학 측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수험생의 여러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과 불합격을 정하는 형태로 일본의 입시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까지도 이 문제[현행 입시에 내재한 불공평함]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똑같은 시험에서 1점 차이를 다투는 것을 공정·공평하다고 보는 일본의 입시문화 탓에, 이런 내용은 검토회의의 최종 제언에 반영되지 않았다.

3. 일본 대학 입학시험의 맥락에서 본 공통테스트의 공정성 · 공평성

일본 대학입시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평가하는 객관식 시험이 제도화된 것은 공통1차시험이 실시된 1979년부터다(腰越慈, 2020). 교과서적 지식만이 아니라 진학 적성 또는 취업 적응 능력도 평가하는 진학적성검사(1947~1954)와 능력개발연구소테스트(1963~1968)가 시행된 적도 있지만, 이런 성격의 공통시험은 일본 사회에서 좀처럼 자리 잡지 못했다. 반면, 국·공립대학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공통1차시험(1979~1989)이 개발되고, 사립대학도 이용할 수 있는 대학입시센터시험(1990~2020)이 도입된 이래, 공통시험은 1년에 한 번, 새롭게 출제한 문제를 이용해 모든 수험생이 일제히 치는 것이고, 성적은 정답을 맞춘 문항의 배점을 단순 합계해 산출하는 것이 일본의 시험문화로 정착했다. 이점은 대학입학공통테스트(2021~)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통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개인의 학력을 공정·공평하게 평가하는 제도여야 한다는 믿음이 일본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2000년대 이후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인해 공통테스트에 요구되는 공정성·공평성의 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대학 입학자 총 59만 2,878명 중 65.8%는 일반선발, 31.7%는 학교추천형선발로 대학에 진학했고, 종합형선발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文部科学省, 2020: 65). 그러나 2022년에는 총 62만 8,531명의 대학 신입생 중 36.2%가 학교추천형선



출처: 文部科学省(2023: 1-3)에 제시된 수치를 토대로 저자가 비율을 계산함.

그림 1 2022년도 국립 · 공립 · 사립대학별 신입생 선발 방식의 비율

발, 13.5%는 종합형선발로 대학에 진학했으며, 일반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49%까지 줄어들었다(文部科学省, 2023: 1-3). 이처럼 면접, 소논문, 자기소개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종합형선발이나 학교 성적과 교내 활동을 평가하는 학교추천형선발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어떤 요소를 신입생 선발의 준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공정성·공평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강해졌다(林洋一郎 外, 2003: 11).

더구나, 학령기 인구감소와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맞춰 대학 입시전형이 다양화되는 중에도, 일본 사회에는 "경쟁적 필기시험의 결과=학교력(学校歴)을 중시하는 엘리트 선발이라는 논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中村高康, 2011: 212). 학교추천형선발 제도는 1960년대 후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학력 시험만으로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수험생을 대학 교육 내부로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고(中村高康, 2011: 198), 현재도 고교와 대학의 서열구조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학교가 주로 이용하는 "대중을 염두에 둔 매스(mass) 선발적 특성을 띤 선발제도"이다(中村高康, 2011: 145). 종합형선발은 직장인, 귀국자녀(帰国子女), 퇴직세대 등에게 학력 시험을 치지 않고도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형으로 고안되었고, 사립대학이 1990년대 이후 주로 학력고사를 기피하는 수험생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어서(木村拓也, 2021: 50-51), 이 또한 추천입학제와 함께 대중적 선발제도에 해당한다.

반면, 학력시험이 엘리트 선발제도라는 믿음은 입학 정원이 제한된 국·공립대학과 표면적인 입학 난이도를 유지하려는 중위권 이상의 사립대학이 취하는 전략 덕분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大内裕和·中村高康, 2021: 17-23). 1979년 34만 명이 응시했던 공통1차시험을 통해 국·공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사람은 10만 명이었는데, 이는 당시 18세 인구 156만 명의 6%에 불과했다. 따라서 공통1차시험은 엘리트 선발을 위한 첫 관문이었다. 센터시험이나 공통테스트는 사립대학도 활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학력 수준을 판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통1차시험에 비해 엘리트 선발제도로서의 성격은 약화됐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공통테스트는 수험생이 상위권 국·공립대학 지원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중견 이상의 사립대학은 학교추천형선발과 종합형선발의 비중을 늘리는 대신 학력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줄임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높은 편차치(偏差値)를 유지하는 전략 — 일반입시의 입학 정원을 줄여서 학력시험의 합격선을 높이는 방식 — 을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적인 선발 방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력시험이 국·공립대학이나 중견 이상의 사립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엘리트 선발제도로 여전히 인식되는 셈이다.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될수록 학력(学歴)을 너머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라는 학교력(学校歴)의 차별화가 중요해지므로,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難関大学) 입시의 첫 관문인 공통테스트가 객관식 학력고사를 통해 공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대학의 경우 여전히 신입생의 82%를 일반입시로 뽑고, 학교추천형 입시와 종합형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한 데 잘 드러난다(文部科学省, 2023: 1-3). 특히, 이런 경향은 최상위권 국립대학일수록 두드러진다. 도쿄대학은 "AO입시[12]나 추천입시의 경우 고등학생의 학습 의욕 저하의 원인

12 administration office 입시의 줄임말로 종합형선발의 이전 명칭이다.

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입시를 선택한 학생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대학 입학 후의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일반선발 위주의 전형을 고수하고 있다(김미란, 2009: 79). 도쿄대학은 2016년부터 학교추천형선발을 도입했지만, 2022년 신입생 총 3,127명 중 일반입시를 치른 신입생은 2,984명(95.4%)인데 비해, 학교추천형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88명(2.8%)에 불과하다(東京大学, 2023: 64).

사실 센터시험이나 공통테스트에서도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른 유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어시험을 공통테스트의 일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큰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처럼 대중적 선발과 엘리트 선발이 병존하는 일본 대입제도의 구조 때문이다. 검토회의가 실시한 설문 조사의 403번 응답자(오카야마현, 50대, 고교 교사)는 "전에도 에이켄 자격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입시에서 약간 유리해졌고 이것은 허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형선발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만이 아니라 공통테스트를 치는 모든 수험생에게 민간영어시험을 부과해서 "비싼 수험료나 멀리 떨어진 시험장 때문에 기회균등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했다. 특히, 지역거점국립대학은 경제적 형편상 국립대학이 아니라면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엘리트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통로라는 점을 고려하면(吉川徹, 2001), 궁극적으로 민간영어시험으로 공통테스트를 대체하려던 문부과학성의 계획은 고등교육 수혜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사회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영어시험 활용 계획을 일본 대입 선발 방식의 다양화와 이중 구조(대중 선발과 엘리트 선발)라는 맥락에서 볼 때 비로소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공정성·공평성의 문제를 초래한 근본적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공통테스트는 일본 사회에서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대입제도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이동을 위한 첫 관문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선발 기제다. 대도시와 지방 사이,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는 경제적 자원과 사교육 기회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민간영어시험이 필수화되면 이러한 격차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제한됨으로써 일본 사회 자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영어시험 활용에 관한 기술적 논쟁이 공정성·공평성이라는 윤리적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하겠다.

V. 결론

이 연구는 민간영어시험 대입 활용 계획의 추진 과정과 대학입시의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교육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학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평가 방식에 국한되었던 데서 벗어나 공정성·공평성이라는 윤리적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입시제도의 다양화로 인해 대학 진학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대학입시의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이 일본 사회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이 좌초된 이후 이뤄진 대학 입학자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공정성·공평성에 관한 일본 사회의 이해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검토회의의 논의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는 공통테스트는 엘리트 선발의 첫 문턱으로서 반드시 절차적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일본의 수험생과 보호자가 대학입시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학력 획득 경쟁이 개방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한 날 같은 시험을 치며, 결과도 총점 합계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中村高康, 2018: 112-113). “점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일본 대학은 단순히 합격자 명단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선, 각 수험생의 점수, 그리고 시험 문항 및 모범답안을 공개한다(小川佳万, 2019: 86). 이처럼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해 온 일본의 입시문화에 비춰 볼 때, 채점자, 채점 기준 및 점수 환산 방법 등이 모호한 복수(複數)의 민간영어시험을 대학입시에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대학 입학자 선발 방식에 대한 검토가 입학시험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에 머물지 않고, 대학 진학을 둘러싼 실질적 공평성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검토회의가 제시한 “실질적 공평성” 개념은 경제적·지리적 격차에 따른 수험기회의 불평등을 다루는 데 머물렀고, 시험 성적을 수험

생의 배경을 고려해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지리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수험생 간에 유불리가 있어서는 안 되며, 장애가 있는 수험생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학 입학자 선발의 원칙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문제가 공정성·공평성에 관한 논의를 촉발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지리적 불평등에 대한 일본인의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사회가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32.3%에서 38.5%까지 늘어난 반면,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5.2%에서 20%까지 줄어들었고, 사회경제적 유동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산층 이상인 사람도 지위 불안(status anxiety)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났다(Hommerich, 2017: 38). 또한, 교육 열망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 누구나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대중교육사회는 종언을 고했다(Matsuoka, 2019).

정리하면, 많은 사람이 경제적·지역적 불평등을 언급하며 민간영어시험 도입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일본이 점점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차단된 사회로 변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도 일본 교육제도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투고일: 2024년 2월 14일 | 심사일: 2024년 6월 26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참고문헌

김미란. 2009. “일본의 대학 자율화와 대학입시: 도쿄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일본교육학연구』13(2), 65-85.

김용·엄아름. 2018. “일본 대학입시정책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28(3), 185-216.

지은림. 2021. “해외 대학입시 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중국, 일본, 프랑스 사례 중심.”『비

교교육연구』 31(6), 29-55.

阿部公彦. 2017.『史上最悪の英語政策: ウソだらけの「4技能」看板』. ひつじ書房.

_____. 2018.“なぜスピーキングにゅうしでスピーキング力が落ちるのか.”南風原朝和 編.『検証迷走する英語入試』, 69-88. 東京: 岩波書店.

_____. 2021.“ペラペラ信仰がしゃべれない日本人を作る.”松岡亮一 編.『教育論の新常識』, 107-127. 東京: 中央公論社.

荒井克弘. 2018.“高大接続改革の迷走.”南風原朝和 編.『検証迷走する英語入試』, 89-105.東京: 岩波書店.

_____. 2021.“高大接続改革の現在.”中村高康 編.『大学入試がわかる本』, 249-271. 東京: 岩波書店.

中央教育審議会. 2014.“新しい時代にふさわしい高大接続の実現に向けた高等学校教育, 大学教育, 大学入学者選抜の一体的改革について.”12月 22日.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5/01/14/1354191.pdf(검색일: 2023. 11. 15.).

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2020a.“大学入試に関するweb意見募集について.”9月 30日. https://www.mext.go.jp/content/20200929-mxt_daigakuc02-000009870_3.pdf(검색일: 2024. 2. 5.).

_____. 2020b.“大学入学者選抜における英語4技能評価及び記述式問題の実態調査の結果(概要 速報版② 選抜区分別調査).”11月 16日. www.mext.go.jp/content/20201113-mxt_daigakuc02-000010877_5.pdf(검색일: 2024. 2. 5.).

_____. 2021.“大学入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 提言.”7月 8日. https://www.mext.go.jp/content/20210707-mxt_daigakuc02-000016687_13.pdf(검색일: 2023. 12. 6.).

大学入学者選抜の公正確保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9.“大学入学者選抜の公正確保等に向けた方策について.”5月 31日.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5/31/1417495_001.pdf(검색일: 2024. 6. 4.).

英語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4.“今後の英語教育の改善·充実方策について報告: グローバル化に対応した英語教育改革の五つの提言.”9月 26日.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02/houkoku/attach/1352464.htm(검색일: 2023. 12. 30.).

NHK. 2019.“東大に活用指導を 発言 下村氏は 当たり前のこと.”『NHK政治マガジン』

(11月 19日).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26130.html(검색일: 2024. 2. 9.).

南風原朝和 編. 2018a.『検証迷走する英語入試』. 東京: 岩波書店.

_____. 2018b.“英語入試改革の現状と共通テストのゆくえ.”南風原朝和 編.『検証迷走する英語入試』, 5-25. 東京: 岩波書店.

濱中淳子. 2020.“入試改革の迷走: 推進派と研究者それぞれの問題.”『教育学研究』 87(2), 190-202.

羽藤由美. 2018.“民間試験の何が問題なのか.”南風原朝和 編.『検証迷走する英語入試』. 41-68. 東京: 岩波書店.

林洋一郎·倉元直樹. 2003.“公正研究から見た大学入試.”『教育情報学研究』 1, 1-14.

一般社団法人国立大学協会. 2017a.“2020年度以降の国立大学の入学者選抜制度－国立大学協会の基本方針の策定に当たって(会長談話).” 11月 10日. https://www.janu.jp/wp/wp-content/uploads/2021/03/20171110-wnew-nyushi2-1.pdf(검색일: 2024. 1. 11.).

_____. 2017b.“2020年度以降の国立大学の入学者選抜制度-国立大学協会の基本方針.” 11월 10일. https://www.janu.jp/wp/wp-content/uploads/2021/03/20171110-wnew-nyushi1-1.pdf(검색일: 2024. 1. 11.).

_____. 2018.“大学入学共通テストの枠組みにおける英語認定試験及び記述式問題の活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3月 30日. https://www.janu.jp/wp/wp-content/uploads/2021/03/20180330-wnew-guideline-1.pdf(검색일: 2024. 1. 11.).

石川一郎. 2021.『いま知らないと後悔する2024年の大学入試改革』. 東京: 青春出版社.

石井洋二郎. 2020.『危機に立つ東大: 入試制度改革をめぐる葛藤と逃走』. 東京: 筑摩書房.

姜姫銀. 2021.“日本と韓国における大学入試改革に関する一考察: 大学入試の多様化をめぐる議論の日韓比較.”『한국일본교육학연구』 26(3), 1-18.

吉川徹. 2001.『学歴社会のローカル·トラック: 地方からの大学進学』. 京都: 世界思想社.

木村拓也. 2021.“入試多様化の経緯と現状.”中村高康 編.『大学入試がわかる本』, 45-65. 東京: 岩波書店.

木村拓也·倉元直樹. 2006.“戦後大学入学者選抜制度の変遷と東北大学のAO入試.”『東北大学高等教育開発推進センター紀要』 1, 15-27.

木村裕. 2020.“揺れる日本の大学入試改革: その実態と挑戦.”伊藤実歩子 編.『変動する大学: 資格か選抜か ヨーロッパと日本』. 235-264. 東京: 大修館書店.

高大接続システム改革会議. 2016.“高大接続システム改革会議 最終報告.”3月 31日. https://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6/06/02/1369232_01_2.pdf(검색일: 2023. 11. 15.).

腰越慈. 2020.“共通テストの歴史と現状.”中村高康 編.『大学入試がわかる本』. 23-44. 東京: 岩波書店.

教育再生実行会議. 2013.“高等学校教育と大学教育との接続·大学入学者選抜の在り方について(第四次提言).”10月 31日. https://staff.gku.ac.jp/~soumu/data/1.toushin/H25_1031teigenNo.4.pdf(검색일: 2024. 1. 11.).

松岡亮一. 2021.“日本社会が直視しなかった教育格差.”松岡亮一 編.『教育論の新常識』. 20-36. 東京: 中央公論社.

宮本久也. 2018.“高校から見た英語入試改革の問題点.”南風原朝和 編.『検証迷走する英語入試』, 26-40. 東京: 岩波書店.

宮崎亮. 2019.“萩生田文科相「身の丈に合わせて」発言を謝罪 英語試験.”『朝日新聞デジタル』10월 28일. https://www.asahi.com/articles/ASMBX3H6YMBXUTIL00B.html(검색일: 2024. 1. 7.).

文部科学省. 2017.“大学入学共通テスト実施方針.”7月 13日. https://www.pref.iwate.jp/_res/projects/default_project/_page_/001/006/730/170731-02.pdf(검색일: 2024. 1. 11.).

_____. 2020.“大学入学者選抜関連基礎資料集.”https://www.mext.go.jp/content/20200318-mxt_daigakuc02-000005103_8.pdf(검색일: 2024. 2. 5.).

_____. 2021.“大学入学者選抜関連基礎資料集第2分册(高大接続改革の経緯等関係).”https://www.mext.go.jp/content/20210707-mxt_daigakuc02-000016687_3.pdf(검색일: 2024. 1. 10.).

_____. 2023.“令和 4 年度国公私立大学入学者選抜実施状況.”https://www.mext.go.jp/content/20230123-mxt_daigakuc02-000027141_03.pdf(검색일: 2023. 11. 14.).

文部科学省改革推進本部·高大接続改革チーム. 2017.“高大接続改革の進捗状況について.”6月 8日.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ugai/038/shiryo/__icsFiles/afieldfile/2017/06/08/1386419_1.pdf(검색일: 2024. 1. 11.).

中村高康. 2011.『大衆化とメリトクラシー: 教育選抜をめぐる試験と推薦のパラドクス』. 東京大学出版会.

_____. 2018.『暴走する能力主義: 教育と現代社会の病理』. 東京: 筑摩書房.

_____. 2020. “理念先行の改革から学校現場の支援へ:「入試を変えれば教育が変わる」という発想こそ変えよ.”『中央公論』 134(1), 90-97.

_____. 2021. “大学入試改革は「失敗」から何を学ぶべきか.” 松岡亮一 編.『教育論の新常識』, 144-159. 東京: 中央公論社.

日本経済新聞大学取材班. 2019. “英語民間試験, 高校7割 延期すべき 文科省に要望書.”『日本経済新聞』(9月 10日).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9651630Q9A910C1CR8000/(검색일: 2024. 2. 13).

大平誠. 2019. “話題にも上がらなかった 英語民間試験, 枠組みを決めた審議会の委員が証言.”『朝日新聞』(11月 18日).

小川佳万. 2019. “国立大学の大学入試における多様化政策の展開: 東北大学と京都大学を対象として.”『한국일본교육학연구』 23(3), 81-99.

大内裕和·中村高康. 2021. “討議 入試改革から見えてくる高大接続問題.”『現代思想』 49(4), 8-31.

酒井純子. 2021. “声 大学入試改革, 公平さを第一に.”『朝日新聞』(5月 24日).

須藤爽. 2022. “大学入試改革から見る英語教育政策の現状と課題.”『学習院大学英文学会誌』(2021년호), 45-65.

寺沢拓敬. 2021. “グローバル化で英語ニーズ増加の虚実.” 松岡亮一 編.『教育論の新常識』, 128-143. 東京: 中央公論社.

東京大学. 2023.『東京大学で学びたい人へ』. 東京大学.

鳥飼玖美子. 2021. “英語嫌いにさせない教育のために.”『現代思想』 49(4), 32-39.

氏岡真弓. 2019a. “英語民間試験, 下村氏が口火 2013年, 産業競争力会議-活用拡大を.”『朝日新聞』(12月 16日).

_____. 2019b. “課題指摘, 対策は不足 英語民間試験, 有識者会議の議論深まらず.”『朝日新聞』(12月 16日).

Butler, Yuko Goto and Masakazu Iino. 2021. “Fairness in College Entrance Exams in Japan and the Planned Use of External Tests in English.” In Betty Lanteigne, Christine Coombe, and James Dean Brown, eds. *Challenges in Language Testing around the World*, 47-56. Singapore: Springer.

Butler, Yuko Goto, Jiyoon Lee, and Xiaolin Peng. 2022. “Failed Policy Attempts for Measuring English Speaking Abilities in College Entrance Exams: Cases from China, Japan, and South Korea.” *English Today* 38(4), 271-277.

Hommerich, Carola. 2017. “The Gap as Threat: Status Anxiety in the ‘Middle’.” In

David Chiavacci and Carola Hommerich, eds. *Social Inequality in Post-Growth Japan*, 37-53. Abingdon, Oxon: Routledge.

Kane, Michael. 2010. "Validity and fairness." *Language Testing* 27(2), 177-182.

Manns, Mark. 2018. *The Culture of Testing: Sociocultural Impacts on Learning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O Office Bangkok.

Matsuoka, Ryoji. 2019. "The Vanishing 'Mass Education Society'."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22(1), 65-84.

Paxton, Simon, Tae Yamazaki, and Hannah Kunert. 2022. "Japanese University English Language Entrance Exams and the Washback Effe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26(1), 1-20.

Saito, Hidetoshi, Yasuyo Sawaki and Kiwamu Kasahara. 2022. "Evaluating Fairness and Justice of External English Language Test Score Interpretation and Use for Japanese University Admission."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19(4), 422-448.

Saito, Yukie. 2019. "Impacts of Introducing Four-skill English Tests into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The Language Teacher* 43(2), 9-14.

Abstract

Failures in Japan's University Admission Reform and Perceptions of Fairness: A 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English-Speaking Tests in University Entrance Exams

Jeehwan Park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apanese government planned to implement standardized tests such as TOEFL and IELTS, alongside the University Entrance Common Test, to measure English language abilities, including speaking, with the intention of developing global talents capable of competing in the world. However, this plan failed due to the then Ministry of Education's provocative remarks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This incident suggests that the failure of the plan resulted from issues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fairness. Thus, this study intends to describe the unreasonable implementation of the plan and to examine the discussion on fairness in university admission within a governmental committee. As a resul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Japanese society is approaching a critical moment when the issue of fairnes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particularly with the diversification of university admissions and the widening gap across classes and regions.

Keywords | English Education, University Admissions, Procedural Fairness, Substantive Fairness, Regional Disparity